

오피니언

光日春秋

전성철



만약 신심력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내가 딱 한 가지 선물을 주겠다. 무엇이든 애 기해봐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주문 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건강' '돈' 등을 주문하겠지만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거지가 되면 무엇을 하겠으며, 돈을 잔뜩 갖고 병상에 누워만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문하면서도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가장 많은 선택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주의 사회가 대표적인 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엔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그에 못지않은 단점으 로 모든 것을 '배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선택이 넘치는 사회

그렇다면 선택을 주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예를 들어, 국민의 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 문제를 보자. 많은 것들은 깊이 생각해보면 다 선택을 가능 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행복한 인간이 란 사실 많은 선택을 가진 사람이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선택이라면 가장 좋은 사회란 당연히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 을 제공하는 사회다. 선택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배급제 사회'라고 부른다. 공산

리한 후자의 학생들에게 평준화는 매우 좋은 제도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선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는 평준화 제도가 아니라 전자의 학생들, 즉 경쟁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경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머리가 터지도록 경쟁하고 그를 통해 탁월함을 추구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들은 선택을 빼앗긴 채 '뺨뺨'이라는 배급 품에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준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에 얽매이지 않는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다. 평준화를 없애면 우리 교육이 또다시 애당초 평준화를 가져왔던 엄청난 질곡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시민에게 가용한 선택을 줄임으로써 역사를 후퇴시킬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의료 분야에서도 발견한다. 우리 의료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서 선택

을 빼앗고 있다. 무엇이든 값이 똑같다는 것은 선택이 없다는 것이다. '선택이 넘치는 사회'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 사회이다. 비싸게 주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덜 좋은 대신 돈을 덜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만일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의 값이 같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다양성에 대한 갈구를 느끼며 찾아 외제차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돈 있는 환자들이 선택을 찾아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외화를 유출시킬 뿐 아니라 우리 의료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 우리같이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만일 고급 의료 서비스, 즉 선택이 허용된다면 전 세계로부터 환자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과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양한 선택권이란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책을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선택이 넘치는 사회'가 우리 국민이 갈구하는 사회다.

(세제경영연구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고속철 전구간 늦어도 2014년 완공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2012년 '호남고속철도 완공'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11일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을 오는 2014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광주~목포 구간은 무안국제공항 환류 문제 등에 따라 최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국토부 관계자

문제는 오송~광주구간의 완공이던 이 자칫 2015년으로 예정된 호남 고속 철도 전구간 완공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완공 시기는 무안국제 공항 환류 문제 등에 따라 최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국토부 관계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호남고속철도 완공을 자신의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특히 최근 이 지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도 업무보고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생각은 (호남) 고속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당겨서 한

다는 것"이라고 해 2012년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2012년 조기 완공 공약이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1월에만 일자리가 10만개 감소했다는데

지난 1월 일자리가 10만 개나 감소했다고 한다. 고용률이 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고 대졸 실업자는 1년 전에 비해 25%나 늘어나는 등 '실업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고용시장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한데 '실업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닌지 큰 걱정이다.

증가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50만~60만명의 고교·대학 졸업자가 쏟아지는 2월 고용지표는 더욱 참혹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57.3%로 석 달째 내리막이었다. 이는 2001년 2월(56.1%) 이후 최악이다. 하루 전 발표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12만3천명(-1.8%)이나 감소했다. 취업 취약계층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일할 나이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고통일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탄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과 경제난 극복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비교적 안정된 고용형태인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0.1%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등 비임금근로자는 12만3천명(-1.8%)이나 감소했다. 취업 취약계층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용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25%나 증가했다.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음이 다.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도 9.9%나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경권성 등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실업의 대규모화와 장기화는 결국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돈맥경화' 현상은 풀릴 기미가 없다. 회사채와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는 요지부동이고, 소비와 투자가 움츠러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고 있다는 징후다.

는 것처럼 흔적없이 사라져버리는 유동성 함정에 갇혔기 때문이다.

케인스 이전 고전경제학자들은 금리를 낮추면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개인 소비도 늘 것으로 믿었다. 대공황이 일어나자 사정은 달라졌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경제성장도 멈췄다. 케인스는 이를 가리켜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다.

이 함정에 빠지면 금리로는 경기를 부양하기 힘들다. 금리를 계속 내리면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때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오히려 은행에 보관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

90년대 일본의 경기침체가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당시 버블 붕괴가 시작된 이후 두 차례의 제로금리 등 대대적인 금리인하와 재정투입 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1.1%에 그쳤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

최선의 방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빠졌다면, 공급보다는 수요 창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설이다. 정부가 재정을 기업과 가계에 직접 투입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방법이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면 0.5%포인트 더 내릴 것이고, 더 이상은 소용없다면 인하 금리인하와 재정투입 정책을 꺾지 않을 것이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1.1%에 그쳤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

밑빠진 독



특별기고

김필식



은 국민에게 짜릿한 승리감과 자부심을 안겨줬던 2002 월드컵 4강진. 감동의 물결이 사그라진 후 이렇다 할 국제 경기 한 번 치러보지 못했던 광주가 오랜 침묵을 깨고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다.

류 화합의 장으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만큼 적합한 곳이 또 있을까. 장차 각국을 이끌어갈 전 세계 170여 개국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대한민국과 광주를 찾게

은 남들이 흔쾌히 불러줄 때 의미가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불리운 기회도 없다. 광주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광주의 문화적 역량과 인프라가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 광주는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불리게 된다.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는 광주의 이름과 노력, 국제적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날아오른다 했다.

광주가 어떤 도시인가. 군부 독재의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랑스러운 도시다.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가 국제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어쩌면 광주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는 새로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재도전을 결정하기 전에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했지만, 기왕에 국제사회에 도전장을 내었으니 부끄러울 것은 결과가 나오도록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광주 U대회, 상상만해도 즐겁다

된다. 우리 광주·전남의 대학생들이 그들과 소통하며 광주 정신을 알리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더욱이 광주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원대한 꿈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우리가 '선언'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 않는다. 이름

물론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경기 침체가 심각한

어떤 사안에 있어 당사자가 된다는 것과 방관자로 머무는 것 사이에는 결과에 있어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시민들이 방관자가 되어버리면 U대회 유치는 어려워진다. 방관자의 선을 넘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대회 성공의 결실도 시민에게 돌아가고, 좌절의 아픔도 시민들의 몫이다. 시민들의 당사자 정신, 아름다운 참여정신이 필요한 이유다. (동신대학교 이사장)

기고

박덕양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법안이 공식 통과됐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조곤 하나하나를 놓고 많은 우려곡절이 있었다는 것은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를 말해준다.

원의 경우 당락이 2~3표 차로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한 표를 재외 국민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2월5일자 정

체널이 방송되는 위성TV, 케이블TV 등 영상매체가 있고 몇몇나라에는 실시간 인공위성 동시인체로 발간되는 국내 신문 해의 현지판등 인쇄 매체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국내의 유권자보다 더 객관적으로 냉정히 판단하여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권을 배제한 것은 재외동포들에게 생색만 내기 위한 반쪽 참정권 입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준비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한인동포들끼리 봉사 단체의 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가 끝나고나면 불법선거라며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일이 잦고 해당국 법원에서 한인들끼리 그나라의 법률에 의해 판결을 받고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재외동포 참정권, 이것이 아쉽다

개특위위원장 YTN TV인터뷰) 그 이유는 해외동포들이 지역현안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전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이유를 붙일 뿐이다. 이제는 인터넷은 물론 세계적 접점은 국가의 한인들이 사는 곳에는 국내 공중파방송의 거의 모든

둘째, 부정선거 관련 조사나 단속 및 처벌에 관련된 사항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에서 양순태 선관위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대 양후보는 사실상 부정선거와 관련 조사나 단속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필자가 미국에서 25여년을 살면서 보고 느낀 바로는, 부정선거에 따른 대책이 확실히

또한 단체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을 정했다는데 해외동포들은 특성상 소속된 단체별로 후보를 지지하는 게 대부분의 성향이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막기가 힘들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여야간 후보를 지지하는 분명한 단체를 때문에 국내 선거가 있을지는 극명하게 지지세력이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재외국민 240 만명은 유권자 30%만 투표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표밭이 되어버렸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이란 이유로 소홀히 시행령을 준비했다가는 이 법이 없었던 것만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전 연청 미주지부 회장)

대학 신입생 관련행사 입학 이후로 하자

겨울철 장갑 낀 채 운전 사고 위험성 크다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입학도 하기 전에 두 번이나 서울로 가가 해가게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번은 MT에 참석하는 것이고 또 한번은 입학식 때문이었다. MT의 필요성은 인정지만 굳이 입학식 이전에 해야 하며 입학식도 며칠 빨리 하는 것이 어떤 효과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물론 MT를 학기중에 실시하면 학업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대학은 학기중에는 토요일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부터 하던

지, 토, 일요일에 실시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서로 일출도 좀 일찍인 후에 가면 오히려 서먹서먹하지 않고 자유스럽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MT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2월말에 입학식을 하는 대학들도 여차피 불과 며칠만 지나면 3월 입학식을 하는데 굳이 지방신입생들을 서울로 가게 함으로써 꼭 가계에 부담을 주어야 하는가. 무슨 일이든 학교위주로 해서 안되며 지방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부담을 늘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동

사람마다 각자의 운전 취향이 있게 마련이고, 또한 남녀간에도 운전하는 특징이 다를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남자들보다 유난히 여성분들중에 추운 날씨 탓인지 흰 장갑을 낀 채 운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한겨울에 차에 올라타면 손이 시리고 핸들을 잡기가 겁이 날 정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면이나 또는 세무로 된 장갑을 낀 채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성을 아주 높게 만든다. 면이나 세무등은 비바람이 부드럽기 때문에 핸들 조작시 손과 핸들의 마찰력을 떨어뜨려 미끄러지기 쉽고 더구나 커

브리지 등에서는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된다. 작년 여름에는 뜨거운 여름 야외에서 손등의 살갗이 타는 것을 다 막기 위해 희 장갑을 낀 채 운전하는 여성을 본적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이같이 손등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갑을 끼는 것도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굳이 살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장갑을 낀 채 운전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다. ▲유치상·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